

Barun ICT 9 September KOR newslet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in Media

건전한 ICT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정보통신기술(ICT) 그늘진 곳을 해소하다"



- ICT의 어두운 단면 회피 말아야... 긍정적 대안 제시 필요
- 보다 나은 ICT 문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궁극적 목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최근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통해 국민행복추구에 이바지하는 융합 ICT연구소로 소개되었다. 이 특집 기사는 바른ICT연구소에 대해 정보격차해소, 모바일 과몰입/과사용,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디지털 안전장치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알렸다.

바른ICT연구소는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갖추고, 디지털 기술 발전 이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원인을 규명하고 긍정적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바른ICT연구소의 연구 철학은 ICT의 부작용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의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윤리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실용적 연구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ICT의 어두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e-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사과정,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정우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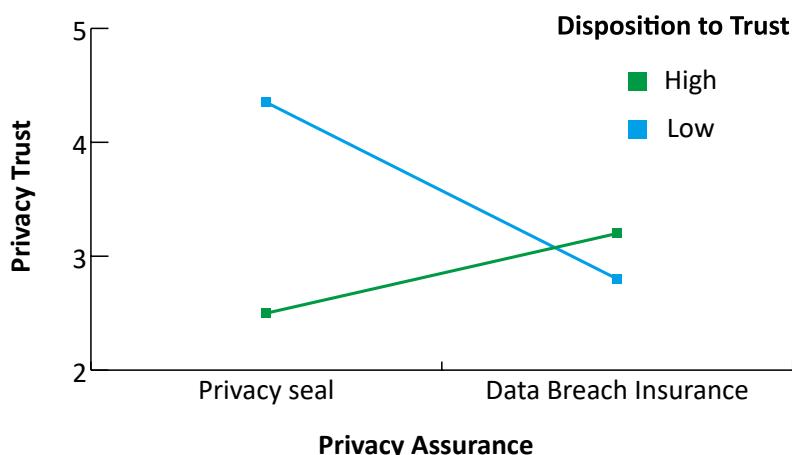
이상근 동신대학교 에너지IoT 부교수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최근 대다수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혹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및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및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인정보보호 보증(Privacy Assurance)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높아지는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보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의 성향(신뢰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혹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프라이버시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경우, 프라이버시 신뢰를 매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신뢰 성향이 높은(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박재영, 정우진, 이상근, 김범수 (2018). e-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게재 예정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 의도 및 태도

김보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2015년 육군전술 지휘정보체계(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의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SNS에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에 저장된 각종 군사기밀이 북한 측에 넘어가는 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해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해 해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설계도 및 전투체계 등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이 해외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 1백 건 넘는 군사기밀을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정보보안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2년 이후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80%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안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술적 방어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정보보안 인사관리 정책 수립 및 인적 보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바른ICT연구소 김보라 연구교수는 최근 발표한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준수 의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보라 외, 2018)’ 논문에서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보보안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범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군 조직구성원들의 정책 이행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이 아무리 높아도 이것이 정책 준수 의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위계적 권력관계, 명확한 명령체계, 집합주의문화의 특성을 갖는 군에서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자신감보다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군에 대한 충성심, 보안 정책을 준수하면 부대의 보안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대의 보안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정보보안정책 준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정책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보상,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 등 개인 수준 요인들은 영향력이 없었다. 여기서 일반 조직과 군 조직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보다 조직을 더 우선시하고 구성원의 강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성상 군인들에게는 개인의 이해득실보다 조직의 안녕과 이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들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보안 안전성과 보안 취약성을 강조하고, 정서적으로는 군 충성심을 상기시켜 정보보안정책 준수가 규범으로서 강하게 인식되도록 군 정보보안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군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김보라, 신지훈, & 김범수 (2018). 군 조직구성원의 정보보안 정책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34(2), 8-46.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

"韓, ICT 산업 부가가치만 강조… 인터넷 중독 등 해결에도 관심 필요"

한국경제, 2018.08.28 일자

한국경제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 "부가가치만 강조… 인터넷 중독 등 해결에 관심 필요"

인터넷게임
정보격차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문제 갈수록 커져
안전한 ICT환경 구축에 기여

하버드대 베크만센터 같은 세계적 ICT연구소가 목표

"인공지능(AI)을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상현실(VR)을 즐기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의 답을 찾는 곳이 바른ICT연구소입니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지만 산업 발전만 치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만큼이나 올바른 기술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ICT연구소는 기술 발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SK텔레콤과 연세대가 함께 설립했다. 정보 격차,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등 ICT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지난 3년간 60여 편의 연구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출간해 ICT 이슈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8월 24일 한국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면에 급속히 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전한 ICT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연구소가 필요한 시대다"며 2015년 SK텔레콤과 연세대가 함께 바른ICT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만큼 기술의 '을바른' 사용도 중요하다"며 우리 연구소는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60여편 이상의 논문 발표라는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안전한 VR 사용을 위한 가이드 제작과 스마트폰 이용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Beacon(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의 무료 지원 등 ICT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범수 소장은 "최근에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상대로 퍼지는 가짜뉴스 및 댓글조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궁극적 해결책은 실버세대의 디지털기술 활용능력의 증진이라는 판단 하에 실버넷과 함께 노인기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릿지(Asia Privacy Bridge) 포럼을 매년 두 차례 개최하는 것에 대해 김 소장은 "프라이버시 이슈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며 "우선 동아시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는 "ICT문제 해결은 물론 올바른 ICT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 ICT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다. 2025년까지 바른ICT 연구소를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BARUN ICT Research

국제 프라이버시 협력을 위한 최적의 전략

2018 ISACIT 학회 포스터 발표

김기윤, 이지형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호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김기윤(석사 과정 3학기), 이지형(석사 과정 1학기) 학생은 2018년 8월 16일~20일 대만에서 열린 '개인정보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국가 간의 국제 사이버 범죄의 공조 요청과 이에 따른 협약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기준의 국가끼리 맺는 양자간 협약, 다자간 협약 등의 비용이 여러 국가가 개입하면서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



📍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123차 MPEG 국제표준화회의 (2018.7.16.-20)

박상효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관련 저장 매체 및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달 덕분에 많은 일이 가능해졌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혹은 자신이 직접 스트리머가 되어 자신만의 동영상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 이면에는, 수많은 기기가 같은 포맷으로 동영상을 송수신 혹은 촬영/재생할 수 있게 하는 국제 표준 동영상 포맷의 역할이 크다. 만약 어떤 메신저로 나의 동영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는데 상대방의 기기에서 “재생할 수 없는 형식”이라는 에러 문구가 나왔다면, 답답해하거나 번거롭게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동영상 형식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로 Moving Picture Experts Group(MPEG)이 있다.



▶ MPEG 회의 및 관련 국제 표준화 회의 개요

지난 7월 16-20일,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Ljubljana에서 123차 ISO/IEC JTC1/SC29/WG11 (이하 MPEG) 회의가 열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MPEG와 ITU-T SC 16/WP 3(이하 VCEG)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2차 J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 (이하 JCT-VC) 회의를 7월 12-18일에 진행하였다.

2013년에 JCT-VC가 ISO 23008-2(HEVC 혹은 ITU-T H.265)를 1차로 표준화 완료한 지 5년이 흘렀다. 동영상 산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래 비디오 코딩 표준을 위하여 진행하였고, 지난 4월 회의에서 그 정식 이름을 Versatile Video Coding(VVC)로 확정하였다. 본 VVC는 기존의 전통적인 단순 동영상만이 아니라, HDR(High Dynamic Range), 360도 동영상과 같이 보다 더 실감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들에 대한 압축 기술을 동시에 표준화한다. 2020년에 표준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많은 동영상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 다양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 향후 전망

수많은 기술 제안들이 이미 발표되었지만, 본 표준안의 지적재산권 이슈나 시간/구현 복잡도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향후 쟁점 사항이다. 또한, VVC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성능의 우월성뿐 아니라 다양한 논쟁 가운데서도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인공신경망 기술이 높은 성능을 나타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동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높이고 송수신 효율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쉽고 몰입감을 느끼도록 하는 미디어 콘텐츠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탈리아 정부, 발의된 유럽 저작권법에 반대 의사 표명

Andres Jimenez VILLA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새로 임명된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노동부 장관을 통해 2018년 6월 20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저작권 지침이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당은 선출된 여당 유럽 대표를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공식 성명은 2018년 6월 26일 이탈리아 하원이 조직한 인터넷의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Di Maio 장관은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 지침 제 11조 및 13조를 언급했다. 제 11조는 링크세(실제로는 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검색엔진, 소셜미디어나 웹 플랫폼이 신문이나 기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뉴스 기사를 받아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제 13조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사전에 검열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게 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구글은 당사가 조직한 디지털 뉴스 계획에 속한 출판사에 유럽의회원의 명단이 있는 링크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해당 유럽의회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였다. 실제로 2015년 스페인에서 제 11조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구글 뉴스는 스페인에서 철수했다.

제 13조는 제 11조보다도 논란거리가 더 있어 보인다. 제 13조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콘텐츠 필터를 개발하여 유저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알게 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유튜브조차 몇 년 간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많은 소형 인터넷 플랫폼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도구가 되려 인터넷 유저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World Wide Web의 창시자 Tim Berners-Lee 나 위키피디아 공동창업자인 Jimmy Wales 등 많은 사람이 웹의 자유로운 정신을 해칠 것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공업총연합, SIAE 저작권 당국 및 AIE 이탈리아 편집자 연합 모두 유로법률위원회에서 승인된 조치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그들 모두 이 조치로 인해 이탈리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문화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이는 Di Maio 장관의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지난 인터넷 심포지엄에서 밝힌 당의 견해를 고려했을 때 모순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상위 공무원으로서, 문화산업종사자들은 그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생활권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지역사회와 부의 평등분배의 원동력이 되다

Diego BUTTIGLIERO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대부분의 상업플랫폼이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에 중앙집권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협력경제의 빠른 발전을 목격했다. 하지만 드러난 협력경제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다수의 참여를 요하는 인터넷 문화가 민주적인 의미에서의 다수 참여가 아닌 단순히 소수의 상업적 이득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수의 참여로 발달하였다는 점이다. 더하여 협력경제에는 3가지 주요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인프라의 측면에서 협력경제가 중앙화된 정보를 통해 정보사용자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서버 인프라에 대한 값비싼 관리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광고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정부가 관여하여 감시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관리·운용적인 측면에서 협력경제는 지역사회가 플랫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협력경제 계획 자체가 독점기업의 계급구조에 흡수되어 지역사회가 창출해낸 가치를 선점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상위 소수계층에 대부분의 이윤이 집중되고 그 이윤이 선순환되지 못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는 인터넷 시장이 승자독식 체제인 데다가 진입장벽이 높고, 인터넷 독점기업이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노동 착취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다른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같은 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금융권 이외에도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비의존적인 시스템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블록체인의 분산응용(블록체인에 코드가 저장되는 자율소프트웨어 에이전트)과 자가준수 기능의 장점을 통합하여 스페인에서는 앞서 언급된 협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협력경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중앙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협력경제기구의 탈중앙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규정을 직접 암호화하여 지역사회 운용을 위한 민주적으로 설계된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전보다 더 공정한 가치분배 모델 역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과 기계 간에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 소스코드에 내장된 고정불변한 규정을 가지고 중재하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완료될 시 협력경제를 진정한 의미의 협력으로 이끌고 새로운 종류의 협동조합을 양성할 강력한 툴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협력경제를 발생시켜온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기반한 통화의 집중에 제한을 둘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정보의 민주화 및 소득 재분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 자체가 아직 인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여전히 쉽게 가능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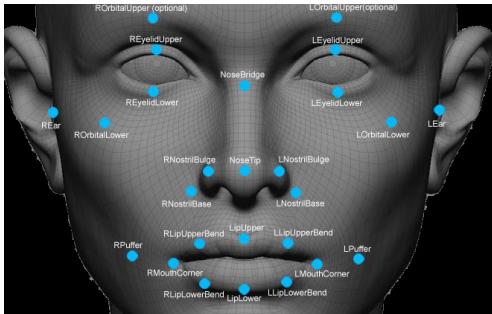
Luca Pimenta MEDEIROS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안면 인식의 공공 규정



모든 도구는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사용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한 컴퓨터 안면인식은 사용 의도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기술은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거나, 가족이 다시 상봉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기업이 사생활 침해를 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야기한다 :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면 인식은 어디까지의 역할을 담당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날 대다수의 여론과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 건전성과 역동화를 일구어 낼 때 특히 더 효과적이다. 안면인식 기술로 말할 것 같으면, 기술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폭력성을 뛸 가능성이 있거나 사생활, 표현의 자유 혹은 집회의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정부의 세심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나 시행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범세계적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져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철저히 제정해야 하기도 하지만,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기업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Chien WANG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원

대만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호텔예약 웹사이트인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대만인은 여행 중 평균 3.6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7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30퍼센트에 달하는 대만인 여행객들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해 소셜 미디어에 여행지 사진을 올린다. 호텔스닷컴은 설문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여행 중 GPS를 통해 명승지를 추천 받는 것 이외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점차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가장 많이 공유된 콘텐츠는 음식 사진이며, 유명관광지 사진이 뒤를 이었고, 그 다음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여행 중의 계속적인 스마트폰 사용에는 불안감 유발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4분의 1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생소한 도시에서 길을 잊거나 비행기를 놓치는 것보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부족할 때 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30퍼센트 이상의 대만인들은 스마트폰 없이 여행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여행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해서 40퍼센트의 여행자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 휴대 가능한 와이파이 단말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만인이 스마트폰에 과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Yudith Helen YUPANQUI FLORES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3기

연세대학교 산업공공학부

정보 통신 기술과 시민 보안



중남미의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범죄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범죄 억제에 힘을 쓰지만 불행하게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 페루에서는 일본에서 제안한 솔루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새로이 채택하게 되었다.

페루와 일본의 관계는 그동안 굉장히 생산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그려왔다. 올해 3월 페루는 일본과 협약을 맺어 일본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페루 정부는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다.

주요한 프로젝트는 안면인식 및 플라그(Plaque)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특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다국적기업인 니혼전기주식회사의 타카히로 카시마에 따르면, 범죄율은 40퍼센트나 감소해 페루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결국 Miraflores 구에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ESAN에서 정보통신부의 디렉터를 맡은 Eddy Morris는 페루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의 데 이터베이스를 모아 앱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앱에 피드백을 남기거나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성된 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Nyamdulan BADAM



인공지능, 실험실 동물들의 구원이 될까?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현대 과학에서 신약이나 화학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직접적인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 발견된 화학성분이 살아있는 세포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고사하고, 화학 성분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7월에 발간된 Toxicological Sciences지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실험에 더 이상 생명체를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인공지능을 통한 실험으로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동안 행해진 동물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몇만 개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예측해내도록 훈련받았는데, 어떤 경우엔 실제 동물실험보다도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 화학자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물실험에 쓰이는 값비싼 실험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것은 아니다. 사실 28개의 제약회사와 93개에 달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미 많은 돈을 신약개발을 위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4월, 미국 당국은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 메릴랜드 베세다의 국립의약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그동안 테스트해온 4만 개의 화학물질들의 특성을 한데 모아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EU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 실험 결과를 예측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쏟아왔는데, 80만 개의 동물실험 결과를 전산화하여 인공지능 기계에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했다고 한다. 조만간, 수많은 동물이 실험용 쥐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점에 인공지능이?

기업 B2B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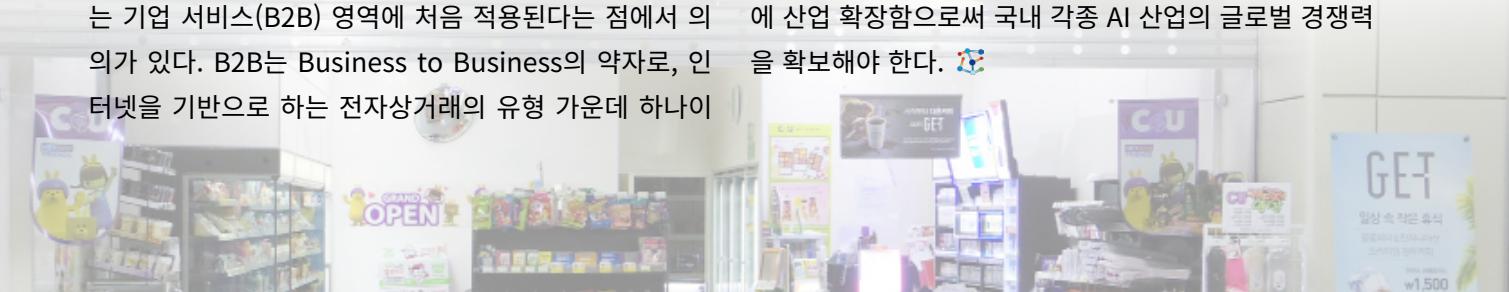
SK텔레콤 인공지능(AI) 서비스 ‘누구’가 24시간 편의점 ‘CU(씨유·BGF리테일)’에 배치돼 매장 근무자 ‘도우미’로 활용된다. SK텔레콤과 BGF리테일은 CU 전국 100개 매장에 ‘누구’를 도입, 매장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누구’는 편의점 CU 계산대 옆에 배치돼, 근무자들이 묻는 매장 운영 관련 약 200여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지금까지 매장 근무자가 편의점 운영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발견하면 본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컴퓨터에서 찾아봐야 했던 것을 ‘누구’가 대체하는 것이다. 근무자들의 질문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찾아 답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3번 이상 편의점을 찾아오는 냉장·냉동·주류 물류 차량의 위치 확인은 물론, 본사가 보내는 공지사항부터 조작 매뉴얼에 대한 문의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또 신입 근무자들이 ‘누구’를 통해 프로모션 등 매장 운영 매뉴얼 및 노하우를 쉽게 익힐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는 전국 CU 직영 매장 약 100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될 계획이다. 편의점뿐만 아니다. 3분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누구’가 비스타 워커힐 서울호텔 객실에 적용돼 AI를 통한 호텔 고객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호텔에서는 조명·커튼·온도 등을 음성으로 제어하게 되며, 고객이 입실할 때는 웰컴 음악으로 손님을 반길 예정이다.

‘누구’의 등장은 지금까지 집안과 차 안에서 주로 사용되던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집 밖으로 나와 ‘편의점’이라는 기업 서비스(B2B) 영역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2B는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

다. ‘기업 간 거래’ 또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라고도 하며, 기업(business)과 기업(business)이 거래 주체가 되어 상호 간에 전자상거래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AI는 B2C(Business to Consumer) 분야인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AI의 사용 범위를 B2B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누구’뿐만 아니라 KT 역시 인공지능을 B2B 영역에 확장 사용하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제휴해 집이나 사무실의 기가지니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출시했고, 국내 특급호텔과 제휴를 맺고 AI를 바탕으로 호텔안내, 객실서비스, IoT 제어, 다국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컨시어지’ 서비스 역시 인공지능이 B2B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예시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미니, SKT의 누구, KT의 기가지니, 구글의 구글홈 등이 있다. 국내에서 AI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스피커 산업은 세계 톱5에 들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인공지능 스피커의 소비자 만족도는 50% 정도로 낮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부분 셋톱박스와 결합하여 IPTV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된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쓰임새나 수요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B2B 분야에 산업 확장함으로써 국내 각종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어디까지 왔나?

김지수

연세대학교 UIC 창의기술경영학과

지난 12일 오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 코란도 차량은 계속해서 차량 분리대에 충돌했고, 뒤따라오던 투스카니 차량의 한 씨는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가 의식이 없음을 알아챘다. 이에 한 씨는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코란도 차량을 막아 서면서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한 씨의 행동은 많은 이의 찬사를 받았고, 현대차 측에선 한 씨에게 신차를 선물해줬다.

이 ‘투스카니 의인’ 사건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다시금 쏠렸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운전자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5개의 레벨로 나뉜다. 그중 레벨 3부터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율 주행 능력을 보여주며, 레벨 4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스스로 최단 시간 안에 안전하게 주행을 하지만 긴급한 상황의 경우엔 운전자에게 권한을 다시 넘기기도 한다. 레벨 5는 아직 이론 단계에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이론이다. 해외에선 BMW가 전기차인 i3에 자동주차 기술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신호 시 운전자에게 차량이 스스로 오도록 하는 기술을 탑재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현대의 넥쏘

가 레이저를 쏘아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인 라이다(LIDAR)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시승식을 실시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 올 3월, 우버 사의 자율 주행 시험 차량이 애리조나에서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첫 자율 주행 차량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넥쏘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역시 라이다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주변을 기계적 학습을 통해 인식했지만, 사고를 미처 피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자율 주행 모드 기술이 장착된 차량 역시 사고를 냈는데, 이는 차량이 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을 경고하며 운전자에게 주행권한을 넘겼음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차량의 소통 부재 혹은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 되기도하는데, 완전한 자율 주행의 경우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모호하여 법적인 논란도 있다.

현대모비스가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자율주행차 관련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8%의 응답자가 자율주행 보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술 안전성’을 꼽았으며, 이는 7%를 기록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국내에선 2020년 초반부터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 양산이 예정된 가운데, 안전성 문제와 차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제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건축과 IT의 결합,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 시대

김상현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은 크게 설계와 시공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건축 설계는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이 위에 도면의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과거에는 건축가들이 트레이싱지라는 반투명 종이 위에 손으로 자와 펜을 사용하여 도면을 그렸지만, 1990년대 CAD(Computer Aided Design)가 도입되어, 동일한 2D 작업은 컴퓨터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후 3D 작업이 가능한 3D CAD, RHINO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하던 작업들이 하나둘 컴퓨터에 의해 훨씬 쉽고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 건축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관심을 끌고 있다. BIM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보급되고 있고, 건축에서 많은 적용 사례가 발표되면서, 이를 홍보하는 언론들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먼저 BIM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이란 컴퓨터 상의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시설물의 정보모델을 구현해 보는 과정이다. 쉽게 표현해 본다면 3차원 기반 건축물의 정보 모델이다. 기존의 2차원 기반의 설계 방식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지만, BIM은 컴퓨터 상 모델에 모든 정보를 넣어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건물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준다.

국내에서 BIM건축 활용 사례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DDP)와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DDP)는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83,024m²의 국

내 최대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 중 하나이다. 형태가 워낙 자유로워 기존의 2D 방식으로는 설계도면조차 불가능했기에 설계 초기부터 시공단계까지 BIM을 활용해 3D 모형(Construction Model)을 만들어 진행했다. 만들어진 모형의 정보를 통해 비정형 외형을 작은 외장 패널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의 시공으로 작업 시간은 물론 디자인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국내 건축 중 BIM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규모뿐 아니라 건물 내 다양한 시설과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 공사 초기부터 BIM모델을 구축했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초고층 빌딩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까지 단축했다. 이에 롯데월드타워 BIM활용은 지난 6월 열린 “2018테클라 아시아BIM어워드”에서 국내 최초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국내 건축의 BIM기술은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의 인천공항터미널 등 다수 프로젝트에서도 BIM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BIM의 도입은 한낱 유행이 아니라 건축과 IT의 결합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춘 건축 언어 표현방식의 진화이다. 하지만 BIM을 활용하는 설계를 확산하기까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BIM의 표준 업무 절차, 정보기술 및 자재 Database 등에 대한 자료의 표준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BARUN ICT Essay Contest

본 기획 연재에서는 바른ICT연구소가 개최한 에세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Best Essay를 매달 한편씩 소개한다. 에세이는 영문으로 쓰여진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The Exploitation of Privacy: Can It Be Justified?

Written By Jin Hee Le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16)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e live in a technologically driven world. Cars are driven automatically, students are taught in cyber classrooms, and with a single click of a button our privacy can be hacked. Three individuals, Glenn Greenwald, Jon Ronson, and Neil M. Richards, discuss the dangers that could occur if privacy were to fall into the wrong hands. Although their definitions of privacy may be different, they share the common idea that privacy, if thrown into the wrong hands, can be abused, leading into hazardous situations.

Greenwald explains that our society would be on

e “that breeds conformity and obedience and submission” (Greenwald) if people were to live knowing that they were constantly being monitored. Essentially, he is saying that the erasure of privacy would lead to the erasure of individuality, as portrayed in George Orwell’s novel 1984. Similarly, Richards states that privacy is all about information, and that information has a direct connection to power. Richards emphasizes the power behind privacy and why someone would want to abuse it. In addition, Ronson explores the consequences that occur when those with power misuse it unknowingly. He mentions people who were all publicly shamed by others online, with the users shaming them most likely not realizing the effect and power of their words. To them, it may have been a simple tweet stating their opinion, but it led to the downfall of another person’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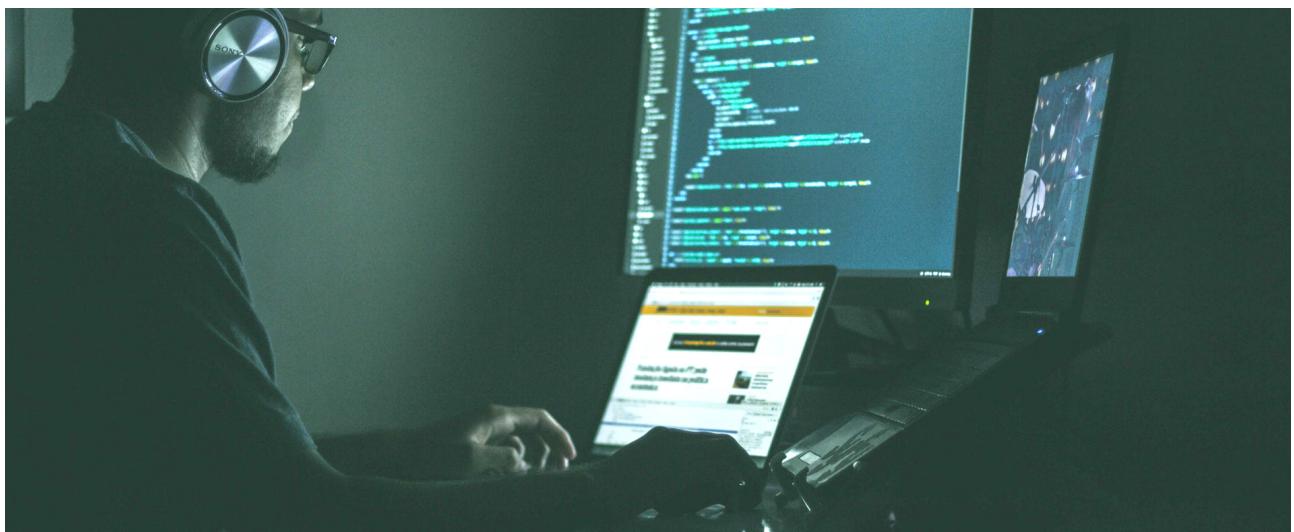
Technology has led to an online following becoming power. Once a person with such authority tweets a couple of words in response, the people involved in these situations were met with their downfalls. Like Richards mentions, privacy is about information which also leads to power, and in these situations, people who have more power can abuse the privacy of other individuals with less power online. Ronson portrays power through Twitter followers and Facebook friends, and shows the danger of privacy violation,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people with power online can violate the privacy of other individuals which leads to their tragic downfalls.

BARUN ICT Essay 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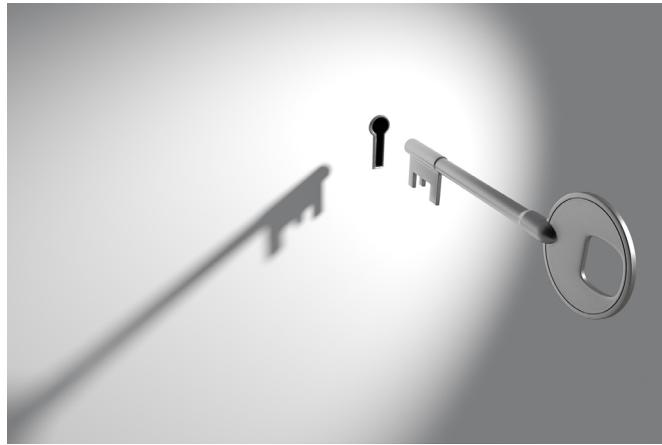
So, how much does technology really impact our everyday lives? There was never a moment in my life where I ever considered privacy and technology to be this closely interwoven. While I was aware that privacy could be violated through technology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network), these readings have brought me new insight and has me rethinking how I control my information on a digital platform. However, I couldn't help but question some of their claims as well. All three authors make out the invasion of privacy to be a bad thing, but I believe that if used correctly it could be positive as well.

Greenwald and Ronson talk as if constant surveillance and invasion of privacy is a terrible thing. Yet, I know that we need surveillance to be safe whether it be on a national or personal level. There are surveillance



cameras on the streets and in stores to protect us in case, for example, we were to be robbed. Without such surveillance,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catch suspects. Additionally, people fear terrorism and other national threats which can effectively be stopped through the proper use of technology. The monitoring of our online searches is used mainly so the government knows what is going on with its people. Whenever a school shooting occurs where the suspect is young, the investigators always go through their internet searches because they are bound to leave behind clues. For example, if the student implanted a bomb, they were usually involved with violent online games as well as actively searching how to build a bomb. Or if they used a gun, they would have searched online how to probably get one and use it. Can surveillance of our online activity when done for security really be called an invasion of privacy? People want to feel secured, but then shame the government for going through their searches. I think it is highly hypocritical of people to want their privacy protected yet also want to feel secured. I don't think security can occur without the exploitation of our personal privacy, and when done in moderate levels there is absolutely no harm behind it. The three authors all mention the importance of privacy, and while I do agree that our privacy should be respected, I don't believe people should fear giving it up, exploiting their own privacy if it is for personal or national security.

BARUN ICT Essay Contest



Greenwald, Ronson, and Richards all have a unified message: the idea of privacy and maintaining it is important. Their reasoning behind it may be different, but they emphasize why society still needs privacy. It all leads back to the question: can the exploitation of privacy ever be justified? If referring to exploitation such as public shaming of other individuals online, then no. One stupid, controversial post online should not lead to a downfall of a human being. Online forum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exist so people can express their thoughts and just because their thoughts were misinterpreted by others online doesn't mean they should have to live in a world of seclusion. However, when it comes to exploiting the privacy of potential terrorists or other national threats, then it should be justified. People need to be able to feel safe, and tha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violation of privacy. The only way we can feel safe in a terrifying world is by offering to exploit our own privacy. It's the least we can do to ensure safety. ☺

Works Cited

Glenn Greenwald. "Why Privacy Matters." TED, Oct 2014,

www.ted.com/talks/glenn_greenwald_why_privacy_matters?language=en

Richards, Neil M. "Four Privacy Myths." *A World without Privacy: What Law Can and Should Do?*, edited by Austin Sar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5, pp. 33–82.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14,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427808.

Ronson, Jon. "How One Stupid Tweet Blew Up Justine Sacco's Life." *The New York Times*, 12 Feb. 2015, www.nytimes.com/2015/02/15/magazine/how-one-stupid-tweet-ruined-justine-saccos-life.html. Accessed 23 May 2018.

2018 Barun ICT Research & ISACA Korea Conference



2018 Barun ICT Research & ISACA Korea Conference

일시 2018년 9월 7일(금) 09:00 ~ 17:00

장소 신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

주최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정보대학원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udit, Control, Privacy & Security

2018 Barun ICT Research & ISACA Korea Conference가 오는 9월 7일(금)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변화한 환경 속 IT 시스템 감사통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적 핵심 학두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빅데이터, 바른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바른ICT트랙은 ICT 기술 발달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픈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고령층의 ICT 이용능력과 정보격차, 인터넷 댓글과 여론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본 행사는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통해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행사 안내는 (사)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Kore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등록 : http://isaca.or.kr/inc_conference/regit.asp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김보라 | Editor 장윤희 | Designer 이예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